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의 책임경영

2019년 9월 19일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GCEF) 설립자 겸 상임대표 안젤라 강주현

GCEF Global Competitiveness Empowerment Forum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 2019 GCEF Global Competitiveness Empowerment Forum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안젤라 강주현

발제자 소개



안젤라 강주현

Angela Joo-Hyun Kang

姜周賢

-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설립자 및 상임대표 (2008-현재)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2019-현재)
- G20 기업경제계 B20 테스크포스 멤버 (2016-2018)
- G20 여성경제계 W20 한국대표 (2017-현재)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2-2016)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2012-2014)
- 국가브랜드위원회 민간 자문위원 (2009-2010)
- KOTRA 해외 CSR 자문위원 (2013-2015)
- 보스턴 칼리지 기업시민센터 연구원 (2006-2007)
- 하버드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졸업 (2006)
- 기업사회공헌 컨설팅사 엔씨스콤 컨설턴트 (2004-2005)
- 국제청소년재단 한국 파트너 전략제휴팀장 (2003-2004)
- 기업에서 홍보·해외마케팅·영업 분야 경력 (1992-2002)

정부 책임경영의 중요성



출처: https://blog.naver.com/munkijang/221437598958

기업의 무책임 행위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310&aid=0000051449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300352&memberNo=190379&vType=VERTICAL

노총의 불법 행위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79&aid=0003235142

시민사회의 신뢰 배신 행위

DAILY NEWSPAPER OF THE YEAR

THE TIMES

Friday February 9 2018 | thetimes.co.uk | No 72453

Only £1 to subscribers £1.60

Top Oxfam staff paid Haiti survivors for sex

● Charity covered up scandal in earthquake zone ● Girls at 'Caligula orgy' may have been under-age

TIMES INVESTIGATION

Sean O'Neill Chief Reporter

One of Britain's biggest charities covered up the use of prostitutes by senior aid workers in earthquake-torn Haiti.

A *Times* investigation has found that Oxfam, which receives £300 million a year in British government funds and public donations, allowed three men to resign and sacked four for gross misconduct after an inquiry into sexual exploitation, the downloading of pornography, bullying and intimidation.

A confidential report by the charity said that there had been "a culture of impunity" among some staff in Haiti



Human eggs grown in lab offer hope to infertile

Tom Whipple Science Editor
Helen Puttick

Human eggs have been grown to maturity outside the body for the first time in a breakthrough for fertility science.

Scientists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announced that they had removed egg cells from women's ovarian tissue and developed them in a laboratory to the point where they were ready to be fertilised. The advance may one day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IVF to help older women to conceive. It could also help to preserve the fertility of girls undergoing cancer treatment.

Evelyn Telfer, the senior scientist involved, said that the work was the culmination of 30 years of research to better understand the early stages of reproduction. Scientists can now study egg development in the laboratory.

출처: https://www.bbc.com/news/uk-43112200

책임경영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세대의 욕구 충족능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

"조직의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직이 지는 책임"

책임경영의 핵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조직의 기여 극대화"

ISO26000

사회책임
국제표준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등
모든 조직

출처: 지속가능발전 정의(1987년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사회책임 정의 (ISO26000)

지속가능발전 목표

< SDGs :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개발) 목표 – 2030 개발 어젠더 >



- 방향성 vs 속도
- 2015년 UN 총회 · 개발 정상회의에서 채택

- 2016년 OECD 장관 포럼 SDGs 세션 현장 설문
- **"OECD 국가가 SDGs에 준비가 되었는가?"**
- **59% 준비 안 됨** 30% 준비가 됨 11% 잘 모름

출처: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식

개별 vs 공동 노력

기업의 노력만으로
가능한가?

속도 vs 방향성

당위성만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가?

현상 vs 근본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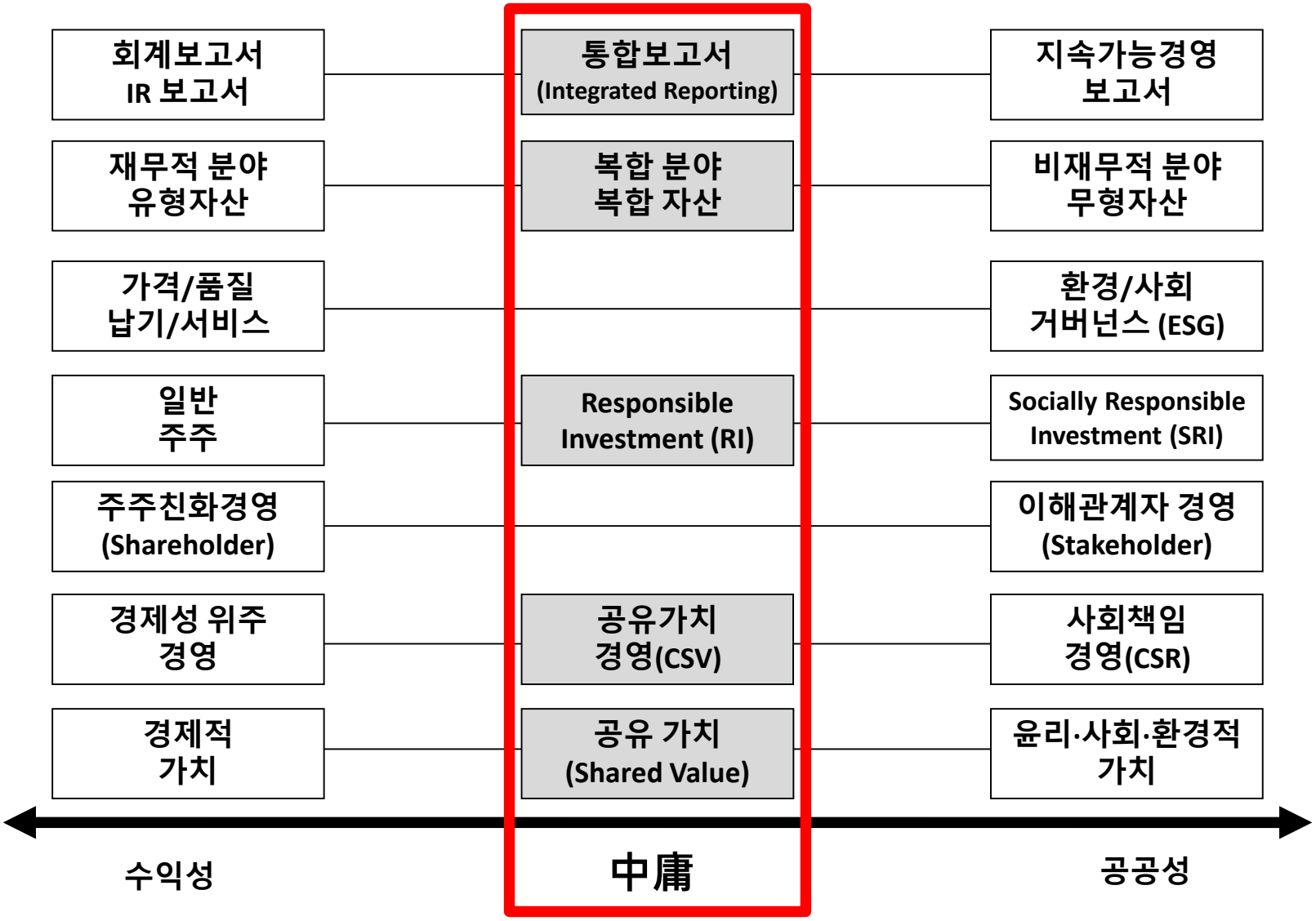
피상적 현상에 대한
미봉책으로 충분한가?

부분 vs 전체

부분적 해결책이
전체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방식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해야 하는가?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책임경영



책임경영 추진 방식 및 주요 확산 기관



ISO26000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 국내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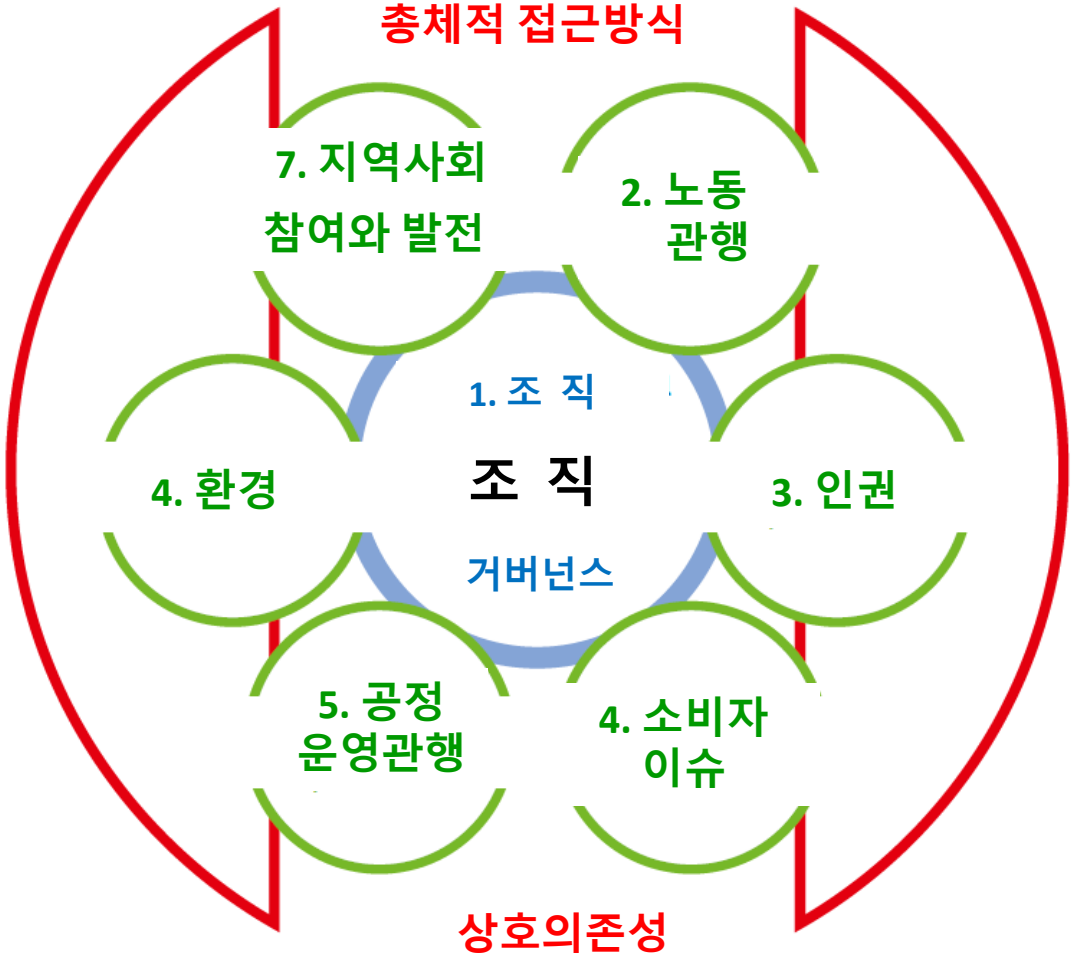


- 국제민간표준을 다루는 국제기관
- '01년 이스라엘 표준기구 초안으로 논의 시작, 프랑스, 호주, 스웨덴, 브라질, 영국 등이 참여하면서 '04년부터 본격 논의 시작
- '09년 80개국 436명 전문가 6개 워킹그룹 구성 (정부 21% 산업 22% 소비자 11% 노동 8% 서비스·지원·연구·기타 19%)
- '10년 11월 77개국 동의로 **모든 조직의 사회적책임(SR) '자발적' '권고' 기준 제정**

- '05년 한국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가 중심이 된 사회적책임표준화포럼 출범 6개 분야 전문그룹 구성
- 산업발전법 개정 - 제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신설 ('07.1.3) 5년 마다 수립주기 명시 ('17.12.12)
- 지속가능발전법 제정('07.8.3)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10.1.13)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1.13 제정)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환경부 담당**

출처: 고동수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슈와 대응 방안 – ISO26000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이슈 페이퍼 2011-273 / 노한균 <ISO26000을 통해 사회책임 살펴보기: 새로운 국제표준의 이해와 실천> 박영사, 2011 / https://www.iso.org/iso-26000-social-responsibility.ht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ISO26000 표준 7대 분야



출처: https://www.iso.org/iso-26000-social-responsibility.html.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표준 중 1. ~ 6.1까지의 개괄 설명 번호 및 연관 넘버링 생략하고 1-7번 순서를 본 발제 내용 설명 편리성에 따라서 교체

1. 조직 거버넌스

< ISO26000 조직 거버넌스 12가지 원칙>

조직이 목표 추구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시스템

거버넌스 관련 행동 및 기대
1) 조직원들의 헌신과 설명 책임을 입증
2) 사회책임 원칙이 실행되는 환경과 문화의 조성과 육성
3) 조직원들이 사회책임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것을 격려
4) 사회책임에 대한 조직의 헌신을 반영하는 전략, 목표, 달성목표 개발
5) 사회책임 성과와 관련된 경제적, 비경제적 유인 시스템 조성
6) 의견 불/일치 영역 식별, 갈등 해결 협상 등 조직 이해관계자와 양방향 소통 과정 수립
7) 조직 거버넌스 과정 정기 검토와 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과정 조정, 조직 전반 변화 의사소통
8) 사회책임적 결정 보장, 조직 결정과 활동 긍정·부정 결과 설명책임을 정하고 결정 실행 추적
9) 조직의 의사결정자 권한, 책임, 능력수준 간 균형
10) 현재세대 욕구와 미래세대 욕구를 포함하여 조직과 조직의 이해관계자 간 욕구 간 균형
11) 여성, 인종, 종족 그룹 등 과소대표 그룹이 조직 고위직에 참여하도록 공정기회 촉진
12) 금융, 자연, 인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

출처: 노한균 <ISO26000을 통해 사회책임 살펴보기: 새로운 국제표준의 이해와 실천> 박영사, 2011

1. 조직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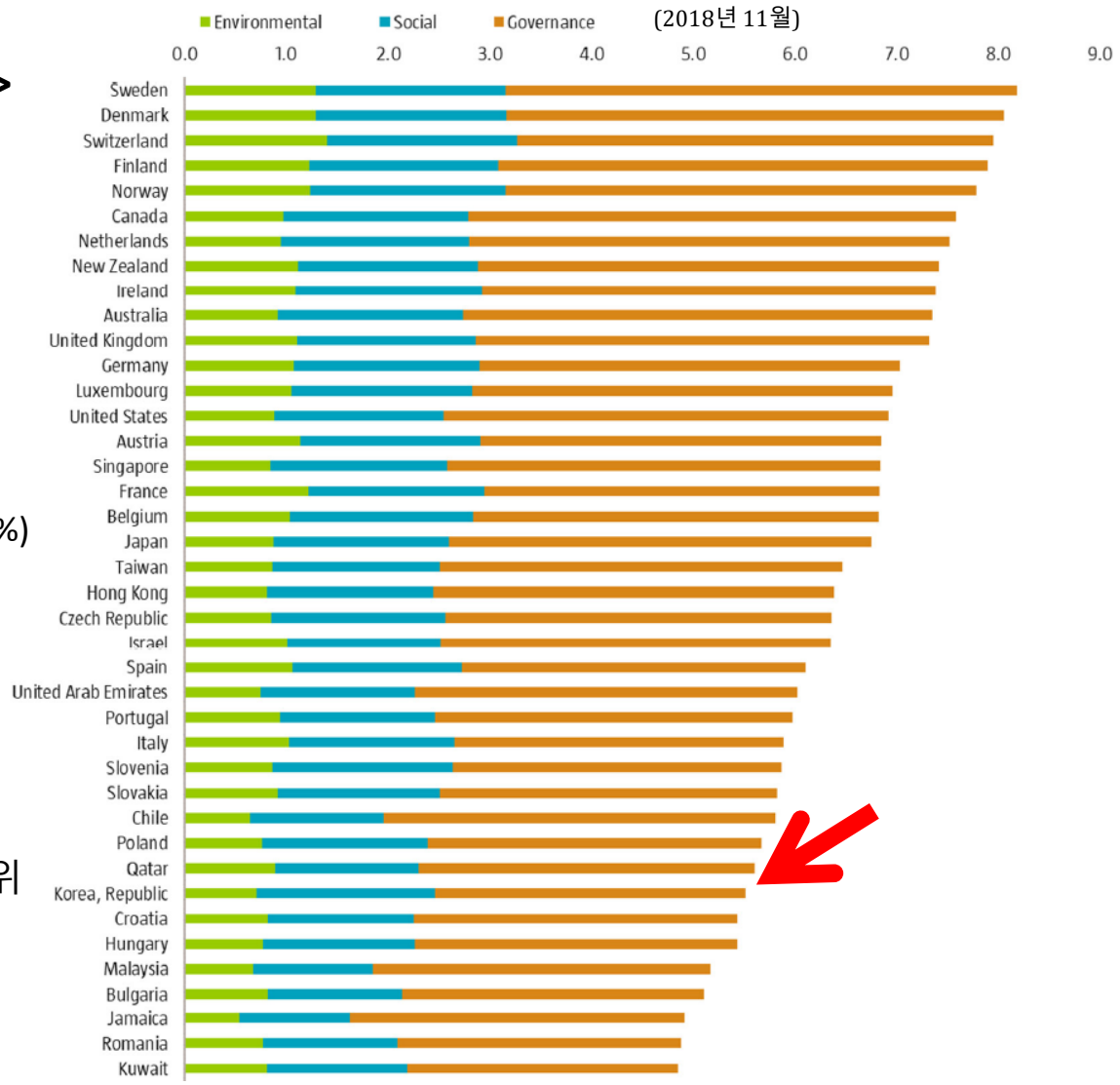
정부	기업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 이해관계자 존중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 이해관계자 존중
Government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시민사회	**노조/노총**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 이해관계자 존중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 이해관계자 존중
NGO Social Responsibility	**Union Social Responsibility**

외에도 사회 모든 조직(정당, 학교 등)의 책임경영 필요

1. 조직 거버넌스

< 국가 지속가능경영 순위 >

- 스위스 투자평가사 “RobecoSAM’s Country Sustainability Ranking” 로베코샘 (RobecoSAM) 개발 발표
- 65개국 비교 (**한국 33위 일본 19위**)
- 환경(15%), 사회(25%), 거버넌스(60%)
- **거버넌스 지표(국채 평가 준용): 자유, 인권, 법치 시스템, 투명성, 정부 안전성, 통화정책 독립성 등**
- 미국 S&P 다우존스와 매년 세계 상위 2천5백개 기업 대상 다우존수 지속가능경영 지수도 발표



1. 조직 거버넌스

< 기업 거버넌스 >

- 애플, 아마존 등 미국 기업 CEO 모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181명 CEO **"고객 가치 제공, 종업원 투자, 공정과 윤리기반 협력업체 거래, 지역사회 지원, 장기적 주주 가치 창출 모두가 기업의 필수적인 목적"이라고 선언**
- 다만,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FT 인터뷰에서 "세금과 규제개혁 저지 전략일 수 있음"이라고 언급
-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경제'를 강조한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

- 한국도 역사 문화 전통이 있음

弘益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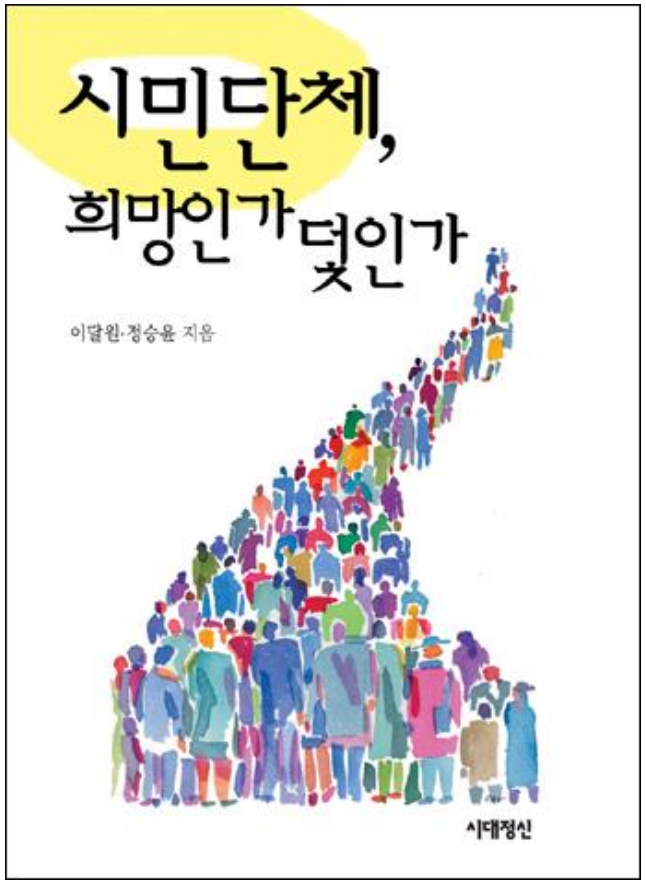
共同體

事業報國

출처: 조선일보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 시대의 종언? 美 CEO 181명 "사회 책무 다할 것" 2019.8.21.
Business Roundtable https://opportunity.businessroundtable.org/ourcommitment

1. 조직 거버넌스

< 시민사회 거버넌스 >



- **과대대표성**: 이념·정치 편향성이 심한 진보좌파 성향 시민단체가 정치투쟁을 주도하면서 이들이 시민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
- **일부 시민단체 기관 주장을 마치 전체 시민사회 주장인 것 처럼 받아들임**
- 국민의 사회지도층 대상 뿌리깊은 불신이 원인
- 다양성에 기반한 민주주의 활성화라는 시민사회의 본래 목표 상실 우려
- 진보좌파 성향, 386세대, 서울 중심과 다른 이념 성향, 세대, 지역, 특성을 가진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

출처: 이달원, 정승윤 <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 시대정신, 2007년.

1. 조직 거버넌스

< 시민사회 거버넌스 – 대변형 NGO 경우 >

- **시민없는 시민단체와 시민운동**
- 과두제적 지배구조, 비민주적 의사결정, 내부 감시 비판 결여, 정부 의존 활동, 상근자수와 회비 불균형, 인건비 중심 예산집행, 시민참여 제안, 공익성 문제
- 개혁 주체에서 개혁 대상으로 전락
- **목적 전치(goal-displacement)의 문제**
- 정부·기업으로부터 자율성, 내부 민주화, 기관 목적 지향적 활동, 공동체 긍정측면 접목 제고, 새 운동 이념·방법 필요
- **언론·지식인·일반시민의 비판 감시 필요**

- 도덕성, 투명성, 견제, 균형 기반으로 내부 지배구조와 조직이 운영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책임성, 민주성, 정당성, 비효율 문제**
- 기업(주주)·정부(유권자) 같은 명확한 책임대상 부재와 이해관계자 범위 모호
- UN과 EU 자문·협의 NGO 지위 심사 시 내부 책임기제 존재 여부가 필수 조건
- **지배구조 투명성, 단순분권화, 견제 강화, 표준화된 책임성 확보 및 환류 기제 마련**
- **온·오프 총회, 운영위원회(이사회) 강화, NGO 상호 감시 촉진, 단체 성과 평가 강화와 공개, 개인 윤리강령(code of conduct) 도입 필요**

출처: 유석춘, 김용민. <한국 시민단체의 목적전치: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11.17.
김준기 <시민단체의 내부지배구조 개선 방안>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5년.

1. 조직 거버넌스

< 노조 거버넌스와 Union Social Responsibility (USR) >

- 미국 칼 폴리 포모나대 도킨스(Cedric E.Dawkins) 교수 이론 근거 처음 제시
- "한 조직체의 행위는 규범적 척도 내에서만 이뤄져야 정당성을 갖는다."
- **"노조도 다른 사회제도와 같이 사회적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 국내 학자들도(김동원, 노광표, 김주일, 배상호, 권순원 등) 노조의 이해관계자 범위에 비 정규직 포함 및 보호 강조, 노조운동 정당성, 사회적지지, 신뢰, 생존 가능성, 영향력 위해 USR 주장

- 아일랜드, 싱가포르 , 일본, 스페인, 미국, 이태리 노총 등은 USR에 선도적 활동
- 과거 LG전자 , 한국노총 등에서 실천 시도
- 하지만, 노조의 사회공헌 활동에 머무름
- 정규직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향상 위한 **배타적, 독점적 노조 이기주의를 넘어,** 비 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 고려한 노동 계층 내 양극화 해소, 지배구조, 회계 등 **노조 운영 투명성, 윤리성을 고려한 공동체 지향 사회적 의제 확장 필요**
- **개별노조, 산별노조, 노총 모두 필요**

출처: Dawkins, Cedric. <Beyond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 Conceptualization of Labor Union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2010
시사매거진 CEO "[경제] 노동계 적폐청산 위해 정부 칼 들다" 2019.7.11. / 정승국, 강충호, 한동균. <노조의 사회적책임(USR) 논의의 현황 및 발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1.

2. 노동 관행

< ISO26000 노동 관행 5+1가지 이슈 >

하청 근로 포함, 조직 내, 조직에 의해, 조직을 대신해, 수행되는 근로와 모든 관련 정책과 관행

주요 이슈	세부 내용
[3. 인권] 8) 근로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ILO 핵심협약
1) 사회적 대화	경제적, 사회적 관심사와 관련된 공통 이해사안에 대한 정부, 고용자, 근로자 대표 간 모든 형태 협상, 협의, 정보 교환
2) 근로 조건과 사회적 보호	임금 및 기타 보상, 근로시간, 휴식기간, 휴가, 징계와 해고 관행, 모성보호와 안전한 식수, 위생, 식당, 의료 서비스 접근
3) 근로현장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최상수준의 신체, 정신, 사회적 행복 촉진과 유지 및 근로조건으로 야기될 수 있는 건강피해를 예방
4) 근무지 인적 개발과 훈련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고 비차별적 기능개발, 훈련, 경력발전 기회 접근과 제공 및 새로운 고용 모색 지원, 훈련, 상담 지원
5) 고용과 고용관계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과 밀접

출처: 노한균 <ISO26000을 통해 사회책임 살펴보기: 새로운 국제표준의 이해와 실천> 박영사, 2011 (인권 부분 - 이해도 향상 위해 내용 발췌 및 재정렬)

2. 노동 관행

분야	No.	ILO 핵심 협약명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실업률			3.85% (2018)	3.9% (2018)	2.4% (2018)	3.9% (2017)	4.85% (2018)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X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실업자, 해고자, 5급 이상자 등의 노조가입 제한 조항)**	X	O	X	O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X	O	X	O
강제 노동	제29호	강제노동	X 병역법(공익근무요원제도), 형법(교도작업), 외국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업장 이동 제한)	X	O	X	O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X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보안법, 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O	X	X	O
아동 노동	제138호	취업 최저연령	O	X	O	O	O
	제182호	가혹 아동노동 철폐	O	O	O	O	O
차별 금지	제100호	동일가치 노동 동일보수	O	X	O	O	O
	제111호	고용·직업 차별대우	O	X	X	O	O

출처: 매일노동뉴스 2013.10.31. / KLI 고용 노동브리프 제77호(2017-10) / 노사발전재단 2019 국제심포지엄 일의 미래, 노사관계와 일터의 변화 2019.7.23. / https://www.ilo.org/global/regions/lang--en/index.htm

2. 노동 관행

< 노조 거버넌스와 노동 관행 >

- 고용노동부 2019년 7월 30일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29호**에 대해 외교부에 비준 의뢰
- 3개 협약과 충돌인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 2019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안을 바탕으로
  △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 퇴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추진

- 현재 초기업노조(산업, 업종, 지역 단위 전체 56.6%) 해고자·실업자 조합원 가능
- **나머지 개별기업 노조는 현재 가입 불가**
- 해고자·실업자 가입은 인정하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은 차별행위

- **기업과 무관한 사람까지 노조에 가입?**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시민단체, 상급단체 활동가 등)
- 현재 해직 교원을 조합원, 간부로 두는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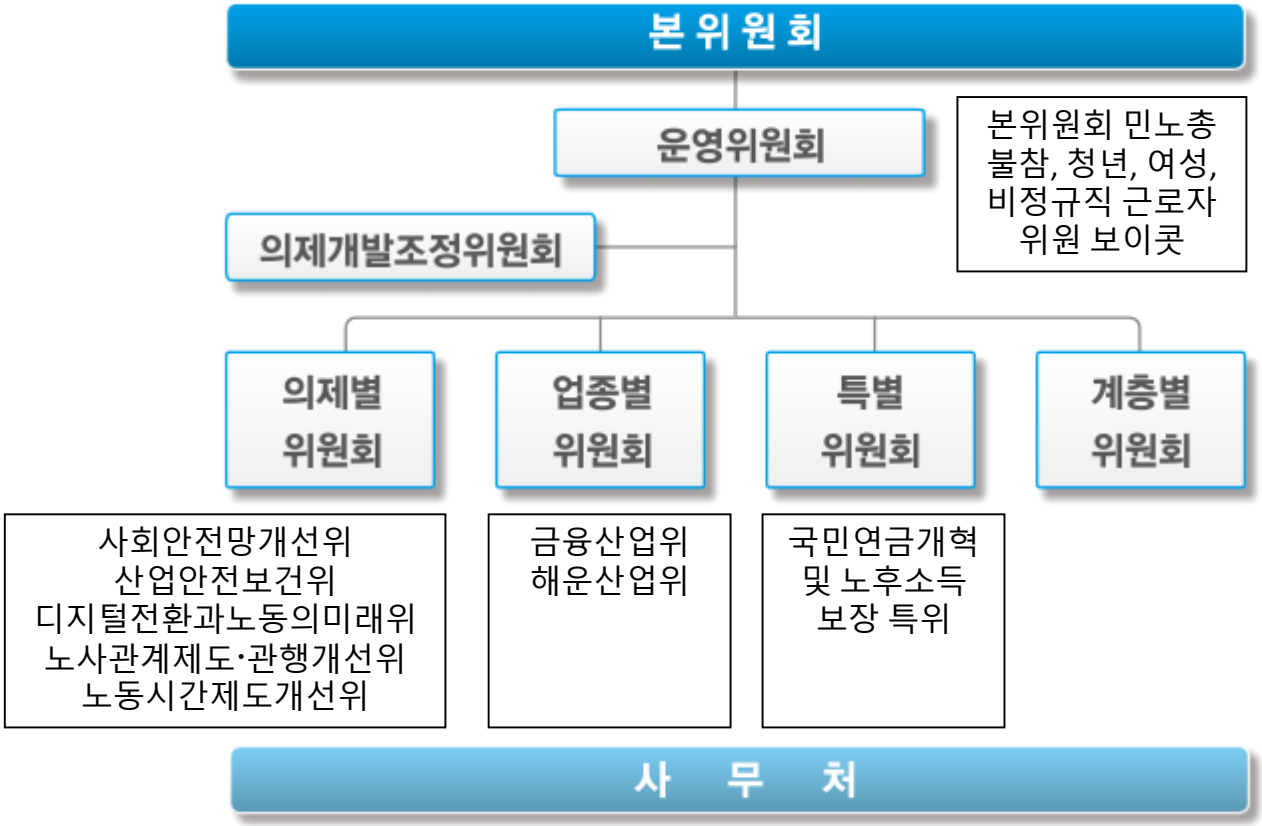
출처: 머니투데이 [MT리포트] 노사 모두 반대하는 ILO 협약, 무엇이 문제인가" 2019.7.31.

2. 노동 관행

< 사회적 대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소상공인 참여 보장"



- '98 1-6월 1기 노사정위원회
- '98 6월-'99 8월 2기 노사정위원회
- '99 9월-'07 5월 3기 노사정위원회
- '07 8월-'16 6월 4기 노사정위원회
- '18.6.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 및 위원회 출범
- '19.7.28. 본위원회 9명 집단 사퇴

출처: http://www.eslc.go.kr/ibuilder.do?menu_idx=2230&root_yn=Y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와 언론기사

3. 인권

< ISO26000 인권 8가지 이슈 >

모든 인간이 부여 받은 기본권

대분류	중분류	주요 이슈	세부 내용
인권 존중 방법		1) 상세한 주의 (Due Diligence)	현재와 잠재적 피해 점검 시스템
		2) 연루 주의	직접연루, 침묵연루, 이득연루
		3) 고충처리 구제책 마련	사법적/비사법적
인권 존중 영역	일반 상황	4) 시민적, 정치적 권리	1세대 인권 (자유)
		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2세대 인권 (평등)
	특정 상황	6) 인권 리스크 예방	법적 보호 없는 비공식 근로를 포함한 복잡한 가치사슬도 포함
		7) 차별금지와 취약 계층 보호	여성, 고령층, 아동, 장애인, 선주민, 난민, 빈곤층, 소수자 등
		8) 근로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2. 노동관행과 밀접

출처: 노한균 <ISO26000을 통해 사회책임 살펴보기: 새로운 국제표준의 이해와 실천> 박영사, 2011 (인권 부분 - 이해도 향상 위해 내용 발췌 및 재정렬)

3.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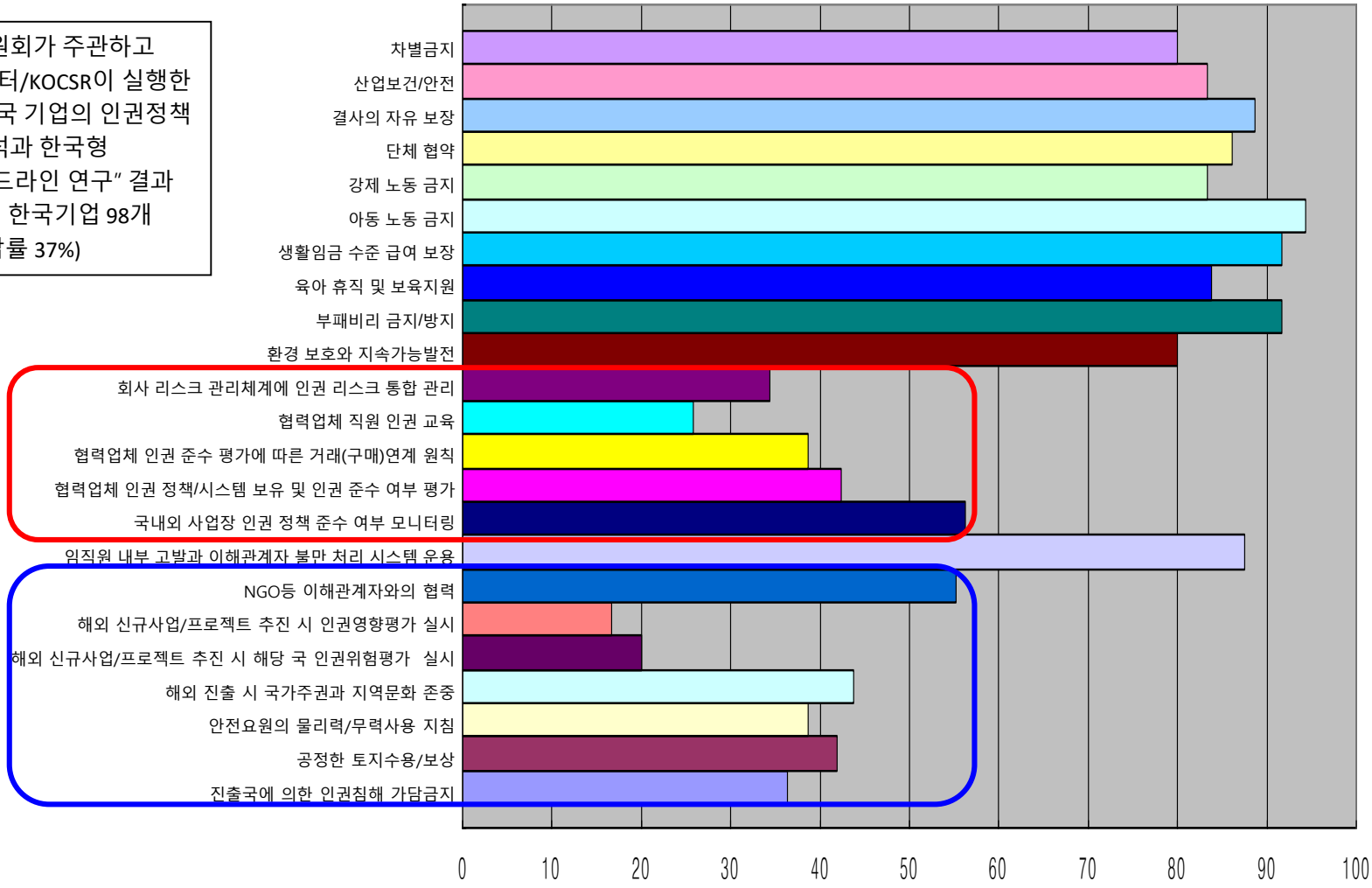
노동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차별금지
노예 및 강제 노동 철폐
아동노동 철폐
일할 권리
동등한 업무에 대한 동등한 임금 권리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의 권리
작업장내 평등의 권리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권리
휴식과 여가의 권리
가족 생활의 권리

비 노동권
생활, 자유, 안전의 권리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의식주 포함)의 권리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모욕적인 취급으로부터의 자유
결혼과 가정 구성의 권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 권리: 의료 서비스 접근성
법을 통한 동등한 인식과 보호
사고, 양심,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사 표현 및 정보와 표현의 자유
문화적 생활 참여의 권리, 과학발전 혜택, 저술 대상 이권 보호
자기 결정의 권리
정치적 생활에 대한 권리
사회 복지에 대한 권리
이동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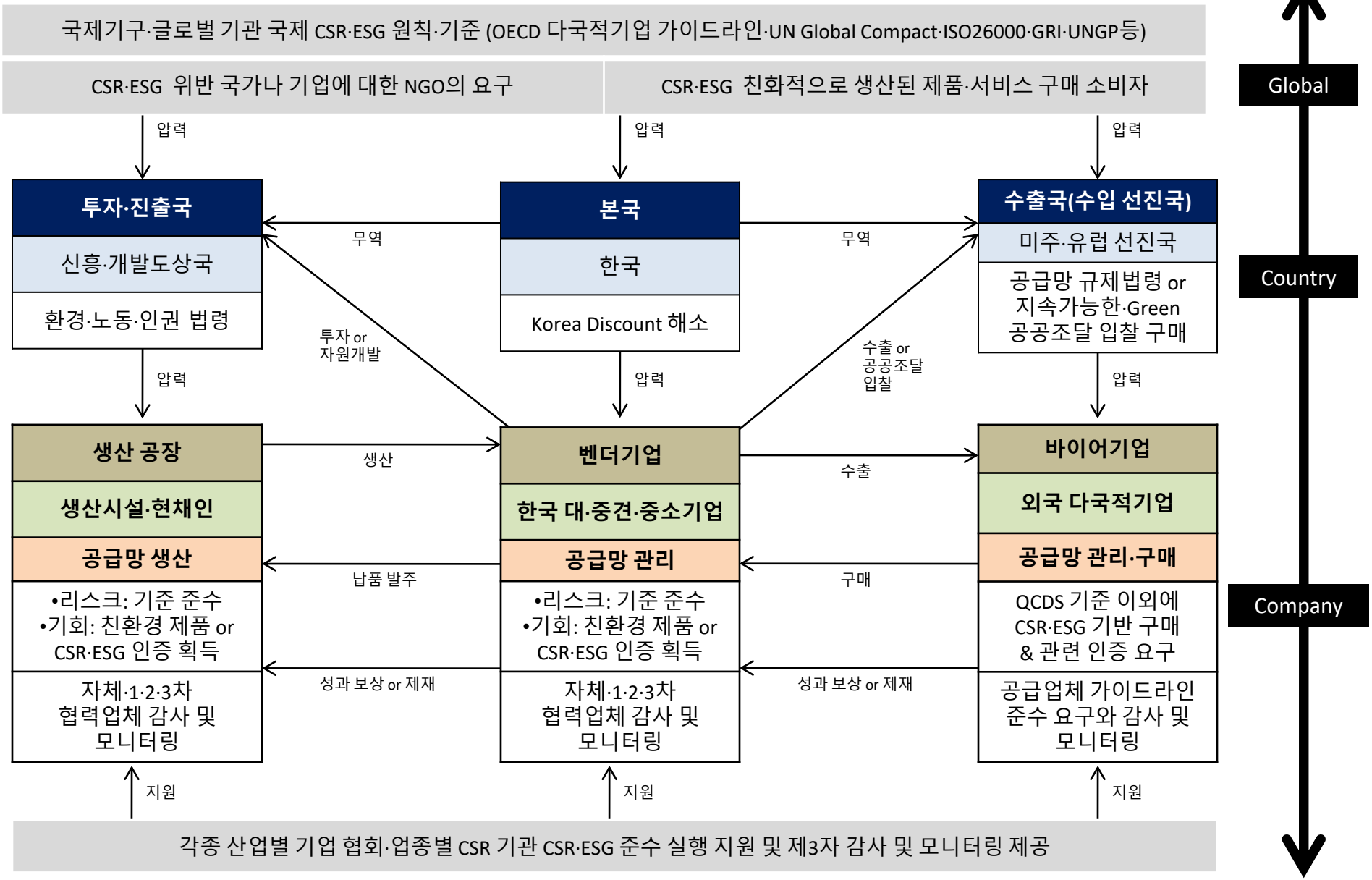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을 위한 정책 프레임 워크: 보호, 존중, 구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보고서 모음 (2008~2010) p26

3. 인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고
기업책임시민센터/KOCSR이 실행한
2008년 "주요 한국 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결과
(N: FTSE 편입 한국기업 98개
/ 응답률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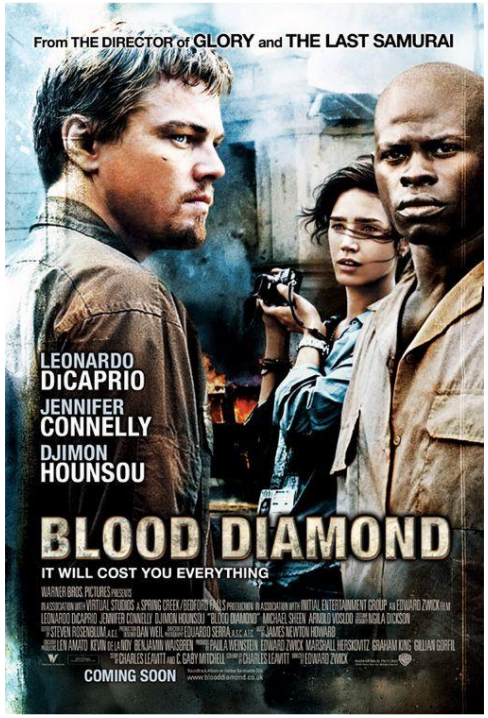


3. 인권


국제기구·글로벌 기관 국제 CSR·ESG 원칙·기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UN Global Compact·ISO26000·GRI·UNGP등)
CSR·ESG 위반 국가나 기업에 대한 NGO의 요구
CSR·ESG 친화적으로 생산된 제품·서비스 구매 소비자
Global
Country
Company
압력
압력
압력
투자·진출국
신흥·개발도상국
환경·노동·인권 법령
본국
한국
Korea Discount 해소
수출국(수입 선진국)
미주·유럽 선진국
공급망 규제법령 or 지속가능한·Green 공공조달 입찰 구매
무역
무역
투자 or 자원개발
수출 or 공공조달 입찰
압력
압력
압력
생산 공장
생산시설·현채인
공급망 생산
•리스크: 기준 준수
•기회: 친환경 제품 or CSR·ESG 인증 획득
자체·1·2·3차 협력업체 감사 및 모니터링
생산
벤더기업
한국 대·중견·중소기업
공급망 관리
•리스크: 기준 준수
•기회: 친환경 제품 or CSR·ESG 인증 획득
자체·1·2·3차 협력업체 감사 및 모니터링
수출
바이어기업
외국 다국적기업
공급망 관리·구매
QCDS 기준 이외에 CSR·ESG 기반 구매 & 관련 인증 요구
공급업체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와 감사 및 모니터링
납품 발주
구매
성과 보상 or 제재
성과 보상 or 제재
지원
지원
지원
각종 산업별 기업 협회·업종별 CSR 기관 CSR·ESG 준수 실행 지원 및 제3자 감사 및 모니터링 제공

3. 인권

< 해외 인권 의무적 규제가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



분쟁광물(Conflict Mineral)규제법(2012)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 무장단체 광물 채굴 사업으로 인한 분쟁 원인 제거 목적
- 콩고민주공화국/인접 9개국에서 채굴된 탄탈륨, 주석, 금, 텅스텐
- 휴대폰, 전자제품 충전기 및 배터리, 반도체 액정 디스플레이 등 IT, 자동차, 항공우주 부품 납품 기업 경우, 원산지 추적을 통해 분쟁과 관련 없음을 바이어기업(미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 의무
- 2014년 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전자전기과와 무역협회, 전자, 통신, 자동차, 항공, 조선,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비철금속, 광물수급 업종별 기업 협회가 협력하여, 비관세 무역장벽 밀착 대응체계 운영 중

출처: http://business-humanrights.org 와 기타 자료 기업과 인권 교재, 국가인권위원회, 2013 참조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78892

3. 인권

< 투자 철회 vs 잔류 변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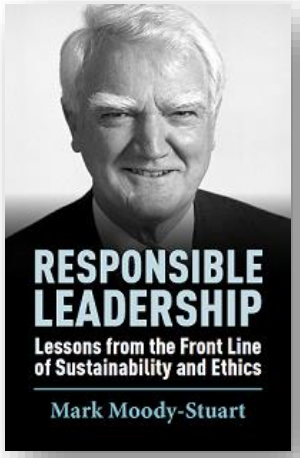
설리반 원칙 (The Sullivan Principles)





- 1977년 남아공 인종차별 문제 제기
- 레온 설리반 (Leon Sullivan) 목사 주창
- 경제적 압력을 통한 부당한 제도 종식

책임있는 리더십 (Responsible Leadership)



로열더치 쉘 및
앵글로 어메리칸
전 회장
유엔 글로벌 콤팩트
이사회 부의장 겸
재단 회장

- '투자 철회'가 아닌 '잔류'를 통해

사회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점진적 변화 강조

출처: http://www.marshall.edu/revleonsullivan/principles.htm / Moody-Stuart, Mark <Responsible Leadership: Lessons from the Front Line of Sustainability and Ethics> Greenleaf Publishing. 2014. p74

3. 인권

- 자발적 실천 vs 의무적 규제
- 연성규범 vs 경성규범
- 1999-2003: 초국적 기업과 기타 기업에 대한 인권 책임 기준 (UN Norms) 의무적 규제 제정 노력 무산
- 2005-2011: 인권과 초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 문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존 러기 (John Ruggie) 하버드케네디/로스쿨 교수 **UN 기업과 인권 정책 프레임워크 및 이행원칙 수립 (UNGP)** 후 유엔인권이사회 통과
- 2008: 국제상공회의소, 국제 경총, OECD BIAC 기업산업자문위 연합 지지 성명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적 협력 강조 >



3.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 2012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개발 2013년 발표
- 2014 공기업, 준정부기관, 상장기업 300곳 배포, 30개 공기업 87개 준정부기관 적용 권고
- 2018 지방공기업 및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범위 확대 및 경영평가 항목 반영

법무부

- 2018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국가보고서/NAP) 수립 및 확정
  (UN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 2019 인권국 기업 인권경영 지침 마련 공청회 진행 중

행정안전부

- 2019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평가 항목 반영
- 지표명: 윤리경영(사회적가치/사회적책임) / 정성 & 절대평가 3점

서울특별시

- 2018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투자 및 출연기관 인권경영 도입 권고

3. 인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19년 7월 시행 한달 총 379건 진정 / 하루 평균 16.5건 / 50인 미만 사업장 159건 (42%)
- 폭언 152건 (40%) 부당 인사 및 업무지시 107건 (28.2%) 험담 따돌림 45건 (12%)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19년 8월 18일 보도자료 / 아시아경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호 진정" 2019.7.16.

3. 인권



출처: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사방에 여직원… 오거돈, 회식 사진 올렸다 사과” 2018.11.19.

3. 인권

기관 내 신고 채널

대내인권침해	대외 인권침해
갑질 피해, 언어 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	(감정노동), 갑질 피해, 부조리, 불공정 계약 및 하도급, 고객 권리 보호 위반 신고

VS

기관 외 신고 채널

공공기관	상급기관	수사기관	언론제보	인터넷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
청와대 인권위	기관의 상급기관	검찰 경찰	신문 방송	각종 SNS	인권단체 시민단체	변호사

4. 소비자 이슈

< ISO26000 소비자 이슈 7가지 이슈 >

개인적 목적의 일반대중 개인 소비자와 상업적, 개인적, 공적 목적 조직과 개인 고객으로 분류

주요 이슈	세부 내용
1) 공정 마케팅	상대를 속이거나, 잘못 이끌거나, 사기 및 불공평 하거나, 불명료하며 애매하지 않게, 모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 정보 제공. 공정 계약 포함.
2) 소비자 보건과 안전 보호	잠재적 위험 없는 안전성 제공 및 제품 리콜 체계 포함
3) 지속가능한 소비	사회와 환경에 악영향이 적은 제품과 서비스 선택. 재활용 및 폐기 서비스 추구. 사회/환경 친화적 제조/재배된 제품 서비스 인증제 등
4) 소비자 서비스 / 지원/ 불만 해결	환불, 수리, 품질보증, 분쟁해결, 갈등해결, 구제절차 마련.
5) 소비자 데이터 보호 / 프라이버시	자발적인 동의를 받은 개인 정보 한정과 개인 식별 정보 보호
6) 필수 서비스 접근	전기, 가스, 물, 폐수처리 서비스, 배수, 하수, 통신 등 필수 공공서비스 권리
7) 교육과 인식	소비자 권리 행사 교육 (유해성, 보건, 안전, 구제절차, 이용 관련 위험 및 예방조치, 매뉴얼이나 설명서 등의 정확한 정보 등)

출처: 노한균 <ISO26000을 통해 사회책임 살펴보기: 새로운 국제표준의 이해와 실천> 박영사 2011

4. 소비자 이슈

정 부 행정 품질 제고 필요



기 업 소비자 보호와 공정마케팅 필요



언 론 편파성 없는 공정성 필요



시민사회 과학적 근거에 따른 운동 필요



5. 공정운영 관행

< ISO26000 공정운영 관행 5가지 이슈 >

조직이 조직의 파트너, 공급자, 계약자, 고객, 경쟁자, 조직이 속한 협회, 정부기관 등
다른 조직을 다룰 때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

주요 이슈	세부 내용
1. 반부패	사적 이득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뇌물 요구/제공, 이해상충, 사기, 돈세탁, 횡령, 은폐, 법 집행 방해, 영향력 거래 금지.
2. 책임있는 정치 참여	부당한 영향력, 조작, 협박, 강압 금지. 투명한 정치 기부 및 정치 참여. 허위정보/표시, 위협, 강요 금지.
3. 공정경쟁	반독점, 반덤핑, 가격고정, 입찰담합, 약탈가격 등 반경쟁행위 금지.
4. 가치사슬에서 사회적 책임 촉진	조직의 구매, 조달, 계약 결정 시, 공정가격 지불 보장, 적절한 전달 횟수, 안정적 계약 보장 등과 같은 적절한 구매 관행 포함
5. 재산권 존중	토지 및 기타 물적 자산, 저작권, 특허권, 지리표시권, 펀드, 저작인격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에 대한 공정보상 지불

출처: 노한균 <ISO26000을 통해 사회책임 살펴보기: 새로운 국제표준의 이해와 실천> 박영사 2011

5. 공정운영 관행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8

TRANSPARENCY INTERNATIONAL

< 부패인식지수(CPI) >

- 발표기관: 독일 베를린 소재 TI
- 공공·정치 부패 정도 측정 지표로 반부패 관심 확산을 위한 도구
- 1995년부터 발표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 조사대상 180개국 (매년 변동)
- **2018년 한국 45위 일본 18위 북한 176위**

  2018년 1-6위 국가(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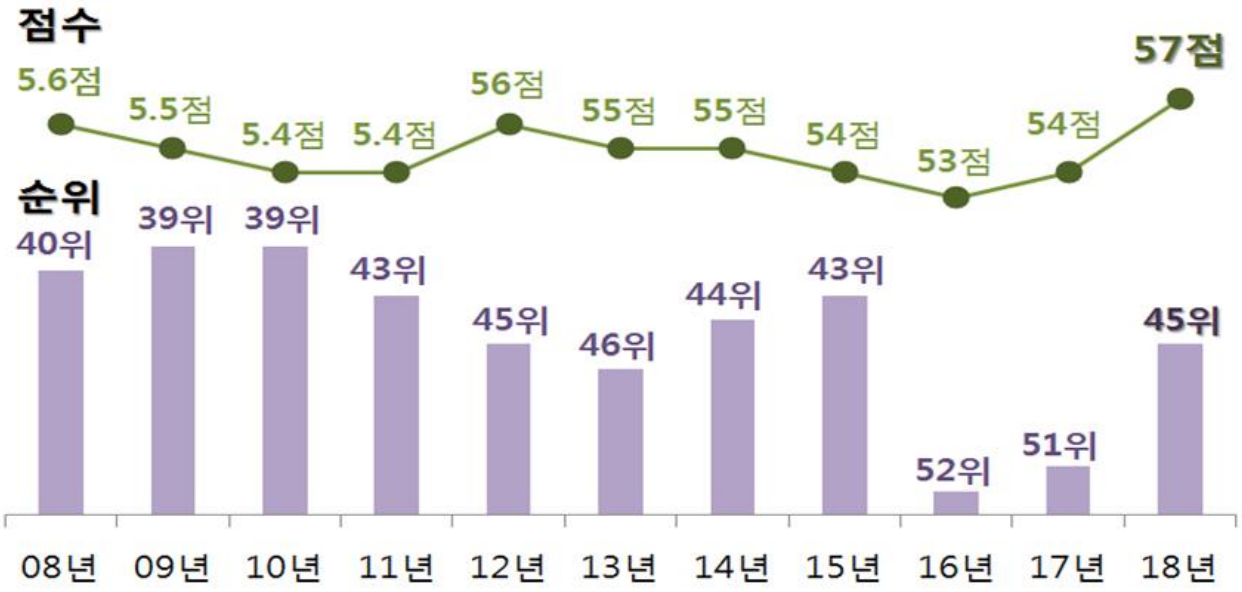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지수 제고를 위한 국제평가 전문가 면담 국외출장 자료(2019.6.24)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Tota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1017&boardNum=79972

5. 공정운영 관행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8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57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OECD	22/30	22/30	25/33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지수 제고를 위한 국제평가 전문가 면담 국외출장 자료(2019.6.24)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Tota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1017&boardNum=79972

5. 공정운영 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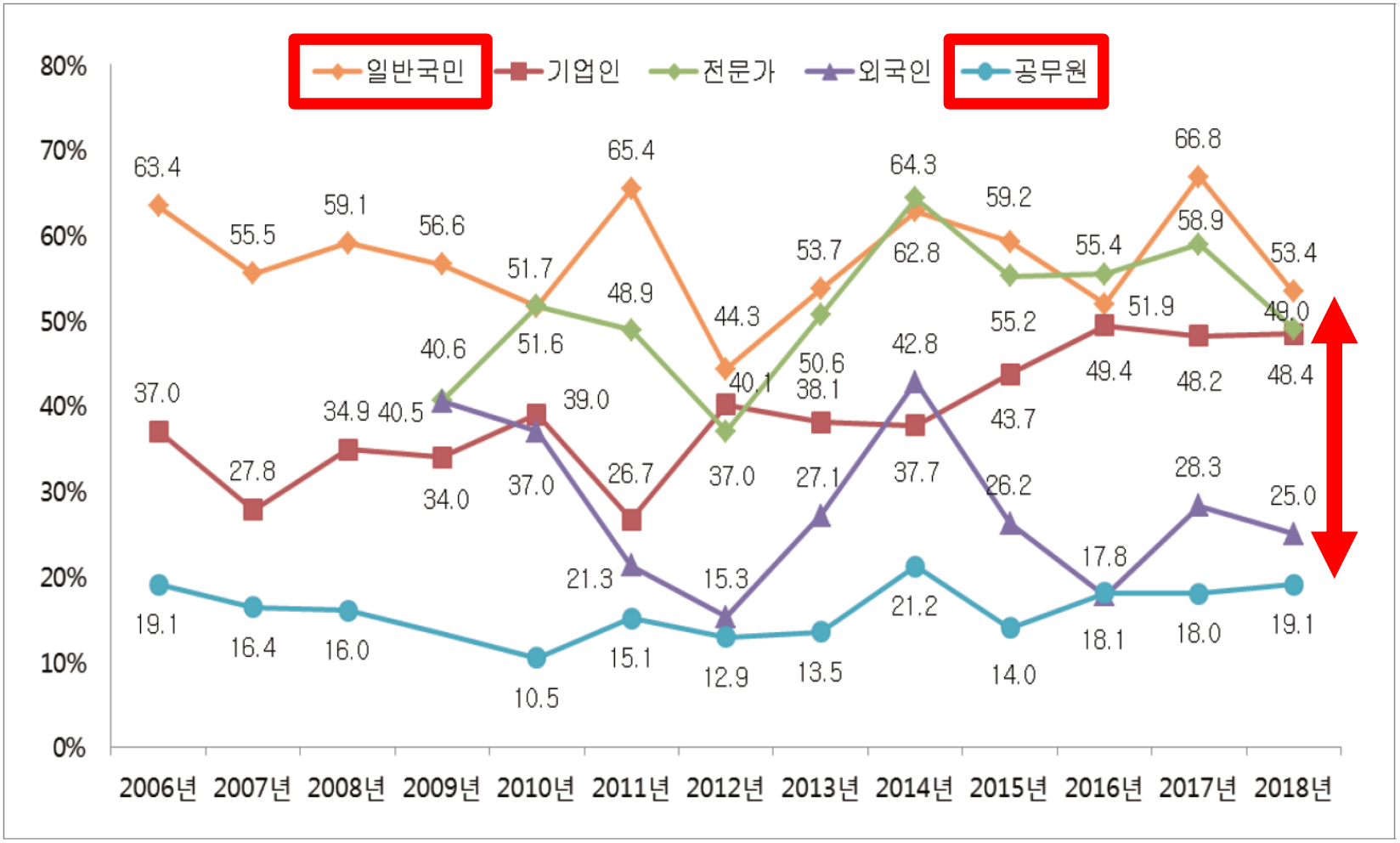
< 부패인식지수(CPI) 조사방법 >

조사자	원천지수		조사항목
기업인 설문 조사	국제경영개발원(IMD)		뇌물이나 부패 존재 여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국가별 부패 수준
	세계경제포럼(WEF)		뇌물 및 추가비용 제공 정보와 공적자금 유용정도 등
전문가 평가	베텔스만 재단(BF)	지속가능지수	공직자 지위남용 정도 등
		변혁지수	부패공직자 처벌 엄정성 및 반부패 정책 효과성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		공무원 공적지위 악용 정도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원(V-Dem)		행정 입법 사법 부패수준과 공공부문 부패수준
	HIS Markit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 수준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EIU)		공적자금 유용정도 및 계약 등 뇌물관행
	정치위기 관리그룹(PRS)		정치시스템 내부 부패 수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럽지역 국제평가기관 전문가 면담 국외출장 자료(2019.6.24)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Tota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1017&boardNum=79974

5. 공정운영 관행

[우리사회 부패인식 추이]



출처: 2018 범정부 반부패 백서/2018년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국민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총 4,530명 대상 설문조사)

© 2019 GCEF Global Competitiveness Empowerment Forum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안젤라 강주현

5. 공정운영 관행

<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협의회 >



- 의장: 대통령
- 위원: 기관장 20인 이내 (권익위,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민정수석비서관)
- 배석: 감사원, 국정원
- 주재/조정: BH
- 총괄: 권익위
- 적발/처벌: 사정기관
- 법/제도 개선: 각급 기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자료. 2017. 9. 28.

© 2019 GCEF Global Competitiveness Empowerment Forum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안젤라 강주현

5. 공정운영 관행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16년 9월 시행 '18년 1월 개정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공직자 등이 **대가성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동일인부터 1회 백만원 or 매 회계연도 삼백만원 초과 금품 처벌
- 식사대접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 국내산 농축산물 10만원 이하
- 직접 또는 제3자 부정청탁 금지
- 규정 위반 시 천만~이천만원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or 이천만원 이하 벌금

예외 조항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등 권리침해 구제·해결
-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이므로 적용되지만, 공익목적행위는 제외)**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의 신청·요구
- 질의·상담 형식 법령·제도 설명·해석 요구

5. 공정운영 관행

<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Government Conduct 운동 해외 사례 >



- 2009년 유럽건설산업협회(FIEC)와 유럽해외건설협회(EIC) 주도로 유럽 28개국 33개국 건설협회 서명
- **기업과 산업계 뇌물제공(Supply) 금지와 함께 정부와 공공부문 뇌물요구(Demand) 금지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
- 개발자금 공여국, 국제개발기관, 차관국 발주기관, 건설산업기업, 엔지니어링 기업 **모두의 시스템적 개선 노력** 필요 강조

출처: FIEC/EIC Statement on Corruption Preven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5. 공정운영 관행

<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Government Conduct 운동 국내 사례 >



출처: 페어플레이어클럽 www.fairplayerclub.kr

6. 환경

< ISO26000 환경 4가지 이슈 >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주변환경 – 대기, 물, 토지, 자연자원, 식물, 동물, 사람, 지구, 우주

주요 이슈	세부 내용
1)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에너지 효율, 물 보존/사용 및 물에 대한 접근, 재료 이용 상의 효율성, 제품의 최소화된 자원 요구
2) 환경 오염 방지	조직이 가지는 오염의 출처와 감소, 물 소비, 폐기물 발생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측정, 기록, 보고 및 친환경적 제품과 서비스 개발
3)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용	완화 측면에서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 출처 식별, 기록 보고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필요 적용 측면에서 기후변화 관련 피해 최소화 기회를 식별하고 대응조치를 실행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적응 능력을 제고
4)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자연 서식지 복원	생물다양성 가치 확인과 보호, 생태계 서비스 가치 확인, 보호, 복원, 토지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와 농촌개발 촉진

출처: 노한균 <ISO26000을 통해 사회책임 살펴보기: 새로운 국제표준의 이해와 실천> 박영사, 2011

6. 환경

정부의 강력한 환경규제

- 원자력 발전 퇴출과 석탄화력발전 축소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 미세먼지 배출총량제 전격 실시
- 화학물질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평가 등록 폐기물 기준에 대한 강화된 유권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등 오염물질 매체법의 배출허용기준과 연동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세부 운영기준 강화
- 경부하 요금인상 및 중부하 요금인하 등 전력요금제 구조개편
- 고농도 미세먼지 억제 위한 특단 조치, 발전업계 대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강화, 에너지 다소비 업종 대상 재생에너지 100 선언 추가 논의 중

NAEK 한국공학한림원 Th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

현행 문제점과 리스크

- **수시로 변하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 과거 굴뚝 중심 평가방식에 근거하여 **환경오염 주범은 산업계라는 인식 전파**
- **환경규제 논의에서 제외된 산업계**
- **산업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규제**
- 화학, 디스플레이, 철강 등 국내 공장 운영이 어려워 **한국 산업/기업/원가 경쟁력 약화**
- **과거 반도체 핵심소재 물질 개발 규제로 일본 수출 규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 엄한 기준 비용으로 신규 중소업체 창업 장애
-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산업생태계 붕괴**

출처: 한국공학한림원 정기발간물 NAEK VOICE 2019년 7월 제39호 <산업경쟁력과 함께 가는 환경규제여야 한다>

6. 환경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업종별 파급효과

[단위: %]

	*POL_22		**POL_30	
	산출	고용	산출	고용
1차 금속	-27.60	-33.30	-27.90	-33.40
서비스/공공/기타	-1.90	-2.60	-1.70	-2.40
화학제품	-4.60	-8.80	-4.00	-8.00
운수	-8.30	-14.70	-7.60	-13.50
금속제품/기계/장비	-3.20	-6.70	-3.10	-6.40
비금속광물	-4.00	-11.00	-3.80	-10.60
운송장비	-0.50	-2.30	-0.60	-2.30
음식료	-0.80	-3.10	-0.60	-2.80
목재/종이/인쇄	-1.40	-4.10	-1.20	-3.70

주 -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한 추정치
- 각 시나리오별 산출 및 고용에의 영향을 BAU 대비 변화율로 표기함. 고용에의 영향은 노동비용 지출의 변화로 측정함
- * POL_22 : 2022년 직접 및 간접 PM2.5 배출량 BAU대비 30%감축 시나리오
- ** POL_30 : 2030년 직접 및 간접 PM2.5 배출량 BAU대비 30%감축 시나리오

*출처 : 유이선. (2019).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 산업연구원

-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 2016년 대비 2021년 대기배출기준 30% 강화
- 2020년 시행예정인 배출허용 총량규제를 전격적으로 1년 앞당김

에너지 다소비기업
2022년 대기배출기준
2017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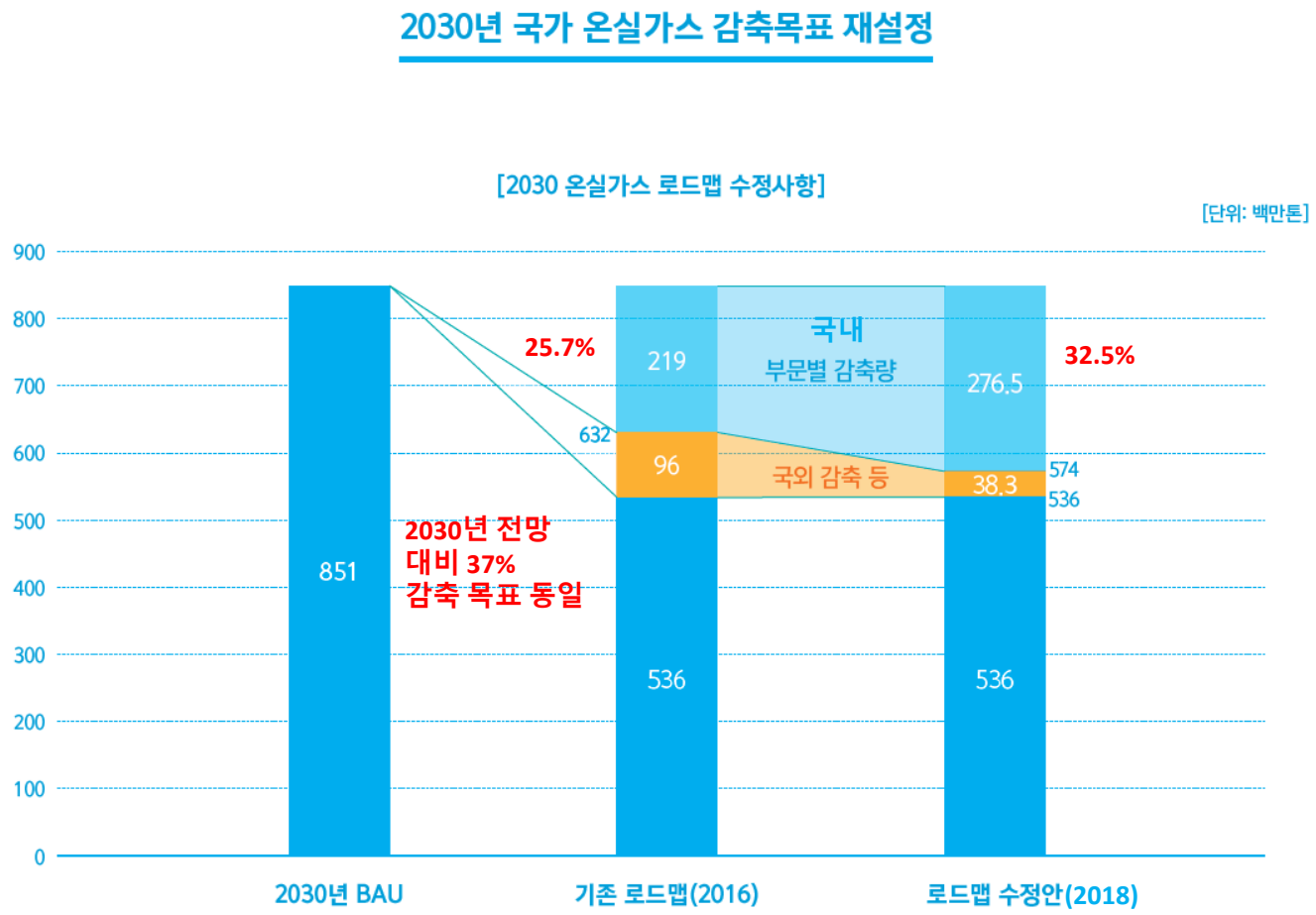
최대 49% 까지

강화 예상
한국 GDP 11조원인

0.6% 감소 예상

출처: 한국공학한림원 정기발간물 NAEK VOICE 2019년 7월 제39호 <산업경쟁력과 함께 가는 환경규제여야 한다>

6. 환경



- 2018년 로드맵 수정
- 국내 감축 부담
  25.7%->32.5%로 상향
- **국내 산업계 부담**
  11.7%->20.5% 증가
- 수정 과정에서
  산업계 협의 부재
- 감축수단 논의 부재
- 산업계 배출권 구입
  비용 매년 수천억원
- **"2030년 이후 한국에서 제조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전망**

출처: 한국공학한림원 정기발간물 NAEK VOICE 2019년 7월 제39호 <산업경쟁력과 함께 가는 환경규제여야 한다>

6. 환경

NAEK 한국공학한림원 Th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

산업경쟁력과 함께 가는 환경규제 필요

1. 경제와 환경 효율성 종합 평가 필요
2. 정부와 산업계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제
3. 에너지 및 환경 정책 거버넌스 재검토

   녹색성장위원회 25명 위원 중 산업계 경험 전무
4. 전체 과정적 사고 방식으로 전환

   유럽이 개발 적용하는 과학적 분석과 제3자 인증
5. 미세먼지, 온실가스, 폐기물 정책 개선

   온실가스 감축 탄소세율 유예 통한 원가부담 경감,
   독일처럼 태양광 확산으로 인상된 전기요금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인하해 주는 방식 등 고려

- 글로벌 여건
- 시장 조성 수준
- 경쟁국가 환경기준 및 관리수준
- 한국 산업구조 및 기술력
- 한국의 국제협상력

환경성 & 경제성
종합 고려 필요

출처: 한국공학한림원 정기 발간물 NAEK VOICE 2019년 7월 제39호 <산업경쟁력과 함께 가는 환경규제여야 한다>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ISO26000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7가지 이슈 >

지역사회가 유지하는 가치를 포함하여 지지하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주요 이슈	세부 내용
1) 부와 소득 창출	기업가정신을 번영시켜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다양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지.
2) 고용 창출과 역량 개발	고용 창출을 통해 빈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직접 투자하고 고용 기회 극대화. 취약그룹을 포함하여 역량 기능 개발과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과 참여
3) 기술 개발과 접근성	지역사회의 사회/환경 이슈해결을 도울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에 기여. 지역발전에 공헌하도록 라이선스나 기술 이전에 대한 합리적 조건을 설정.
4) 보건	모든 조직이 보건에 대한 권리 존중.증진/위험/질병예방/피해 완화에 기여 필요. 공공부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조직이 지역사회 보건에 기여 필요.
5) 교육과 문화	모든 수준 교육을 촉진하고 지원,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지식을 촉진, 문맹 근절 돕는 행동 참여. 문화적 전통과 지역 문화 인정, 문화 유산 보존 보호 등.
6)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지역사회 조직/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 육성, 지역사회의 좋은 조직시민이 되기 위해, 지역사회에 대해 하는 능동적인 지원활동
7) 사회적 투자	지역사회의 사회적 삶 개선을 목적으로 자원을 교육, 훈련, 문화, 보건, 소득창출, 기반시설 개발, 정보 접근성 개선 등에 투자하되 스스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투자

출처: 노한균 <ISO26000을 통해 사회책임 살펴보기: 새로운 국제표준의 이해와 실천> 박영사, 2011 (지역사회 부분 - 이해도 향상 위해 내용 발췌 및 재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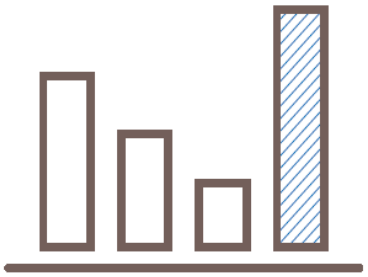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한 눈에 보는 2017 년 한국 기업사회공헌 >

229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비용 총액

2조 6,689억 원

매출대비
0.14%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율

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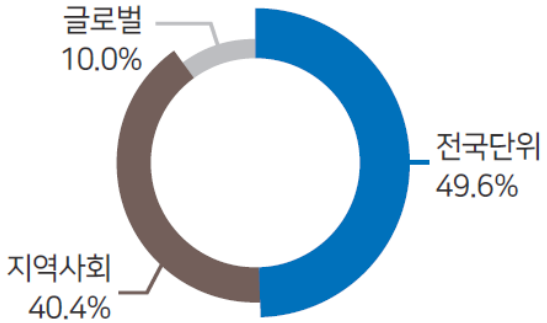
1인당 연간
평균 봉사시간



250개 핵심 프로그램
평균 수행기간

7.9년

핵심 프로그램
대상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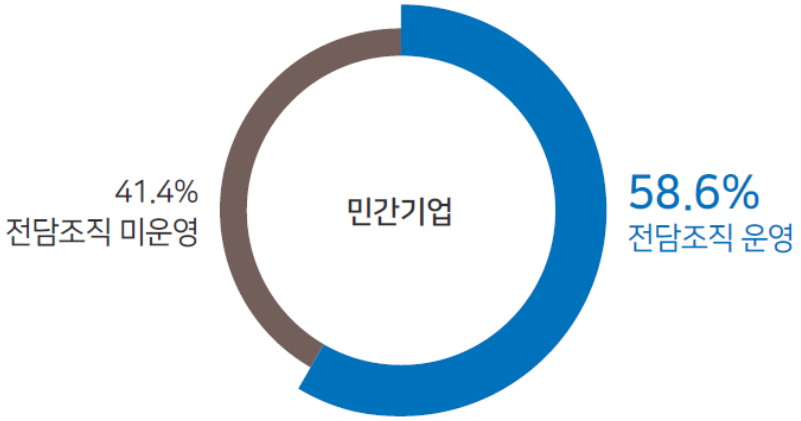
* 해당 문항에 응답했거나 매출액이 공시된 173개
민간기업 및 56개 공공기관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대한상공회의소, 2018 사회공헌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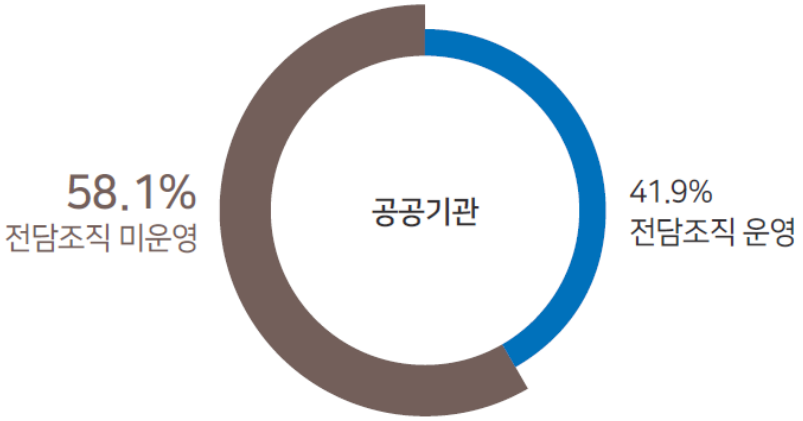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한 눈에 보는 2017 년 한국 기업사회공헌 >

분류	1위	2위	3위	4위	5위
비용 기준	사회복지	교육·학교·학술	문화예술·체육	의료·보건	지역상생
프로그램 기준	사회복지	교육·학교·학술	문화예술·체육	사회통합	환경·창업·일자리



민간기업	주요 직속부서(%)	주요 인력규모(%)
전담조직 운영	홍보·커뮤니케이션: 32.8 인사·총무: 13.8	2~5인: 63.8 10인 이상: 15.5
전담조직 미운영	총무팀: 29.3 홍보팀: 19.5	1인 전담: 51.2 2~5인: 46.3



공공기관	주요 직속부서(%)	주요 인력규모(%)
전담조직 운영	기획·전략: 46.2 홍보·커뮤니케이션, 경영지원: 각 15.4	2~5인: 53.8 6~9인: 23.1
전담조직 미운영	총무팀: 33.3 홍보팀, 기획팀: 각 11.1	1인 전담: 61.1 2~5인: 33.8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대한상공회의소, 2018 사회공헌 백서.

© 2019 GCEF Global Competitiveness Empowerment Forum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안젤라 강주현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아시아 15개국 기부 여건 비교>



- 싱가포르는 일원화 방식: 정부 산하 자선위원회가 비영리전반 설립운영 총괄
- **한국은 규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나라**로 **관련 법이 산재**, 관련 정부 기관 多: 주무부처 15개, 지자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 **최소 35개 기관 상대 필요**

출처: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아시아 15개국 기부여건 들여다 봤더니" 2018.7.24. 원 자료: 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Ltd. <Doing Good Index 2018>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아시아 15개국 기부 여건 비교>

Tax deduction rates for charitable donations

Economy	For individuals (%)	For corporations (%)
Singapore	250	250
Taiwan	100	100
Thailand	100	100
Malaysia	100	100
Japan	100	100
Philippines	100	100
Sri Lanka	100	100
Vietnam	100	100
India	50	50
Hong Kong	35	35
Pakistan	30	20
China	30	12
Korea	15	10
Indonesia	0	100
Myanmar	0	0

- 싱가포르는 기부금 대상 세금 지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기부금의 250% 까지 세금공제
- 대부분 국가는 100% 세금공제 제공
- **한국은 아시아 15개국 중 13위**
  * 개인: 소득 30% 한도 내 15% 세금공제
  * 기업: 기부금 100% 세금공제지만 10% 한도

출처: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아시아 15개국 기부여건 들여다 봤더니" 2018.7.24. 원 자료: 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Ltd. <Doing Good Index 2018>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사회적 경제 >

- '사회적경제'는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 고용창출, 고용안정, 유휴인력 활동, 소득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효과
- EU는 실업과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 대안으로 2009년 사회적경제 결의문 채택 통해 강화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퀘벡주 등은 직간접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
- 해외에서는 사회투자기금, 사회성과채권, 사회적금융 등 사회적투자와 연계
- 한국의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 비중은 1.4%로 EU 6.5%의 22% 수준 (2015년 기준)

유형(2016 기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총괄/합계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BH/일자리위원회
조직 수(개)	1,713	10,640	1,446	1,149	**14,948**
고용 인원(명)	37,509	29,861	16,101	7,629	**91,100**

출처: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모음집 ('17.5.10 - '19.4.30) / 민주연구원 정책자료실 http://idp.or.kr/dataRoom/?mode=view&table=network&b_idx=51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사회적 경제 >

구분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공통	개별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판로지원, 교육, 홍보, 컨설팅, 창업/운영지원, 정책자금 융자	세제(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감면, 기부금 인정 등), 모태펀드 운영 등
협동조합	-		-
마을기업	사업비		-
자활기업	인건비, 사업비, 창업자금, 컨설팅		사업 및 시설자금 융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법 국회 계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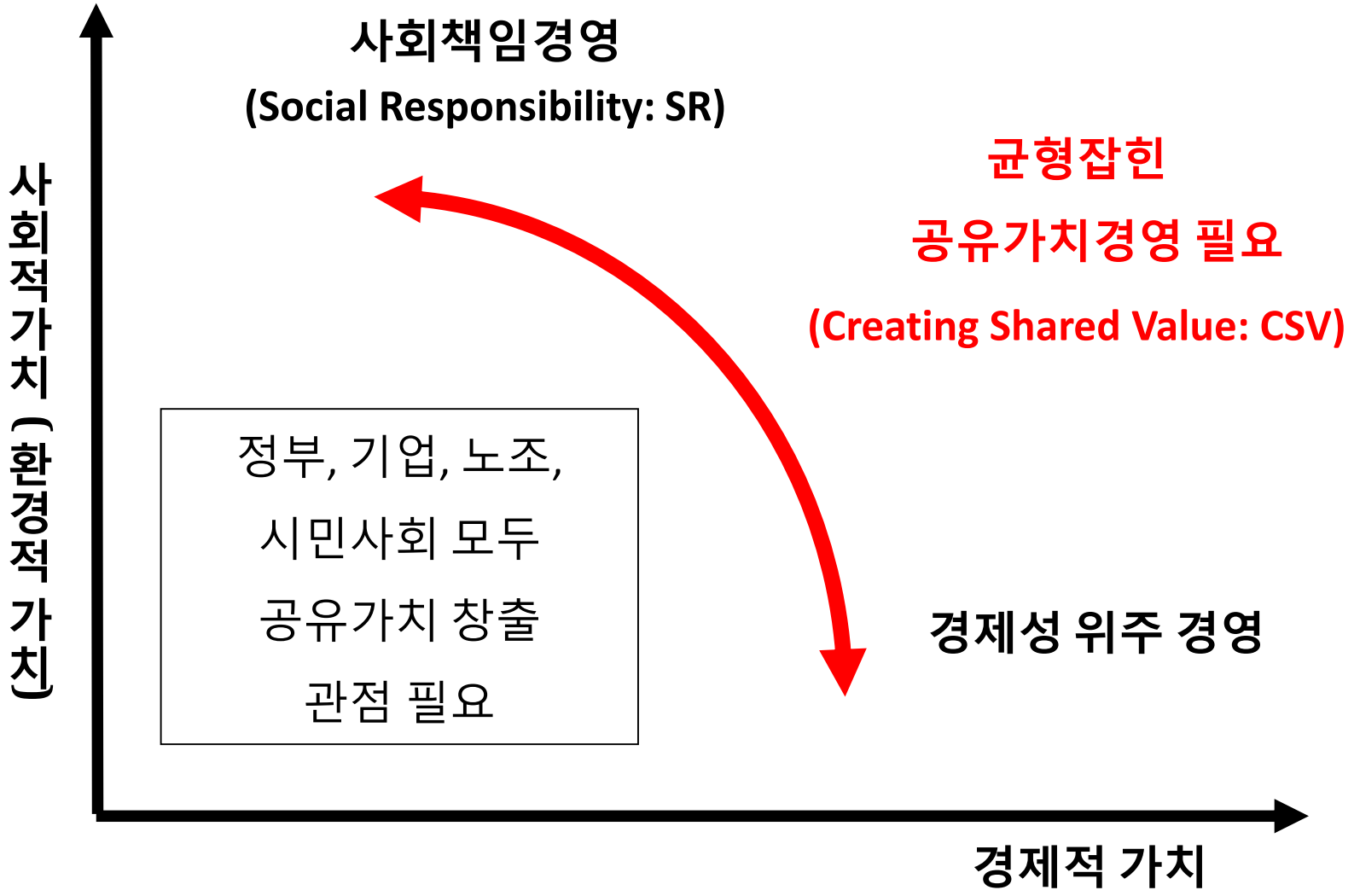
①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위해 공공부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 (사회적경제 기본법)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
* 사회적경제 발전정책 심의 조정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③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가치 국가운영 핵심원리 반영, 사회적가치 위한 공공부문 책무 규정
*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적가치 성과평가, 평가지표 개발, 사회적감사 시스템 구축 등

출처: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모음집 ('17.5.10 - '19.4.30) / 민주연구원 정책자료실 http://idp.or.kr/dataRoom/?mode=view&table=network&b_idx=51

시사점 및 결론


사회책임경영
(Social Responsibility: SR)
균형잡힌
공유가치경영 필요
(Creating Shared Value: CSV)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모두
공유가치 창출
관점 필요
경제성 위주 경영
사회적가치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시사점 및 결론

개별 < 공동 노력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등

속도 < 방향성

현실 여건 가능성 고려

현상 < 근본 원인

근본적인 해결책 고민

부분 < 전체

풍선효과 부작용 지양

제도

정책

행동

인식

문화

CHANGE

시스템적 접근 방식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구